

2018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 정 위 (1교시) -



성 명 :

응 시 번 호 :

응시자 유의사항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해 양 경 찰 청

형법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의 실현과 관계가 깊다.
- ②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③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헌법상의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 ④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2. 10년간 남편의 병수발에 지친 甲은 남편을 살해할 의도로 남편의 머리맡에 농약을 탄 물주전자를 두고 집을 나왔다. 그러나 마침 귀가한 甲의 여동생 乙이 목이 마르던 참에 농약이 든 주전자 물을 마시고 사망하였다.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살인죄
- ② 과실치사죄
- ③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 ④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실체적 경합

3. 甲은 乙을 살해한 후 바다에 시체를 버렸다. 그리고 살인에 사용한 칼도 바다에 던졌다. 이 경우의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살인죄
- ② 살인죄, 사체유기죄, 증거인멸죄의 경합범
- ③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
- ④ 살인죄와 증거인멸죄의 경합범

4. 甲이 丙으로부터 배당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후, 乙을 기망하여 丙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 소송의 1심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게 한 경우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기죄 ② 강제집행면탈죄
③ 권리행사방해죄 ④ 무죄

5. 형법상 책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에게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었던 경우,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 ② 도의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형벌능력으로 파악하나, 사회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범죄능력으로 파악한다.
- ③ 의사의 감정서에 심신상실이라는 기재가 있다면 법적·규범적 관점에서도 감정서의 기재대로 심신상실이라고 판단하여야 한다.
- ④ 형사미성년자라도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어야 책임능력이 부정된다.

6.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 ㉢ 원인설정 행위에 실행의 착수시기를 인정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행위와 책임능력의 동시존재 원칙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형법상 책임 무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 ㉤ 책임비난의 근거를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구하는 견해는 실행의 착수시기를 원인행위에서 인정한다.

- ① $\neg (\bigcirc) \supset (\times) \supset (\bigcirc) \supset (\times) \supset (\times)$
 ② $\neg (\bigcirc) \supset (\bigcirc) \supset (\times) \supset (\times) \supset (\times)$
 ③ $\neg (\times) \supset (\times) \supset (\bigcirc) \supset (\bigcirc) \supset (\bigcirc)$
 ④ $\neg (\times) \supset (\bigcirc) \supset (\times) \supset (\bigcirc) \supset (\bigcirc)$

7.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침입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이 히로뽕 제조원료 구입비로 금 3,000,000원을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제공하였는데 공동피고인이 그로써 구입할 원료를 물색 중 적발되었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히로뽕 제조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③ 간첩의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또는 월남하는 경우에는 기밀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 상륙함으로써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 ④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인들이 허위의 공사 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 소송 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8. 예비·음모와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판례는 예비단계에서 범행을 중지한 경우에 형의 불균형 시정을 위해 중지미수규정의 준용에 대해서 긍정설을 취한다.
- ② 일본으로 밀항하고자 甲에게 도항비로 일화 100만 엔을 주기로 약속한 바 있었으나 그 후 이 밀항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밀항의 예비이다.
- ③ 예비죄는 단순한 고의뿐만 아니라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 ④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다.

9. 甲이 乙의 집에 불을 놓은 후, 그 건조물에서 빠져 나오려는 乙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막아 현장에서 소사(燒死)하게 한 경우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 ②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
- ③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 ④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

10. 甲은 乙에게 “丙을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어라”라고 지시했고, 이에 乙은 丙을 폭행하다가 살해하였다. 판례에 의할 때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폭행을 교사하였는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므로 폭행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 ② 살인을 교사하였으므로 살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 ③ 상해를 교사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으므로 상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 ④ 상해를 교사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11. A는 뇌수술에 따른 뇌부종으로 자가호흡을 할 수 없어서 호흡보조장치를 부착한 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에 A의 처 甲은 주치의 乙에게 더 이상의 치료비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퇴원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乙은 A를 집으로 퇴원시킬 경우 호흡이 어려워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이를 만류하였다. 하지만 乙은 결국 甲의 강력한 퇴원요구에 못 이겨 A의 퇴원을 허락하였고, A는 퇴원 후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였다. 甲과 乙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乙은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된다.
- ② 甲과 乙은 모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 ③ 甲은 살인죄에 해당하나 乙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죄이다.
- ④ 甲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乙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된다.

12.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모두 고른 것은?

- ㉠ 협박죄(형법 제283조)
- ㉡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
- ㉢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
- ㉣ 업무상비밀누설죄(형법317조)
- ㉤ 강제추행죄(형법298조)

① ㉠, ㉢

② ㉡, ㉣

③ ㉠, ㉢, ㉤

④ ㉡, ㉢, ㉣

13. 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압류된 골프장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위 압류시설의 사용 및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게 하여 봉인이 훼손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 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 ③ 형법상 방조행위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 ④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교통사고운전자의 사상자 구호조치의무는 위법한 선행행위의 경우에만 작위의무를 인정하는 것이다.

14. 다음 중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택시에 탄 손님이 강도의사로 과도로 택시운전수를 위협하자 이에 놀란 운전수가 급좌회전하다가 그 충격으로 위 손님의 과도에 찢려 상처를 입은 경우
- ② 남녀가 술을 마시고 승합차를 타고 가던 중 남자가 여자를 추행하자 여자가 욕을 하면서 달리는 차에서 뛰어 내려 사망한 경우
- ③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으로 인하여 음독 자살한 경우
- ④ 타인의 주거지에 방화하였는데 위 주거지에 거주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진화작업에 열중한 나머지 안면부 등에 화상을 입은 경우

15. 형법 제263조(동시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시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② 공범관계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면 동시범의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
- ③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체포감금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 ④ 동시범의 특례를 규정한 형법 제263조는 상해치사죄에도 적용된다.

16. 누범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가석방 기간 중의 재범에 대하여는 누범가중 처벌되지 아니한다.
- ㉡ 포괄일죄의 일부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
- ㉢ 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과 새로이 범한 범죄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 ㉣ 집행유예의 선고로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 그 전과사실은 누범가중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17.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중학교 교사에 대해 “전과범으로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교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그가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제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장래의 일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사실을 발설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 ④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면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18. A의 자취방에서 A와 함께 술 마시던 甲은 새벽 0시 30분경 사소한 말다툼으로 A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죽은 A의 곁에서 몇 시간 잠을 자다가, 같은 날 아침에 A의 자취방 벽에 걸려 있던 A의 점퍼 주머니 속에 A의 예금통장과 인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통장과 인장이 들어 있는 점퍼를 입고 밖으로 나와 근처 은행에 가서 A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작성한 후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여 A의 예금을 인출하였다. 다음 중 甲의 형사책임은 무엇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살인죄, 절도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 ② 살인죄, 절도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
- ③ 살인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 ④ 살인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

19. 선고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 ②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정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④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 그 판결이유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할 필요는 없고,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에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게 된다.

20. 배임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A에게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전세금의 중도금을 지급 받은 후 당해 부동산에 임의로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 담보능력상실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②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③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주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경우 예금주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 ④ 미성년자와 친생자관계가 없으나 호적상 친모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처분에 관여한 경우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21. 직무유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경찰관 甲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혼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두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 ㉡ 검사가 긴급체포 등 강제처분의 적법성에 의문을 가지고 대면조사를 위해 피의자의 인치를 2회에 거쳐 명하였으나, 사법경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 ㉢ 보험처리하기로 했으니 사고처리하지 말아달라는 교통사고 당사자의 부탁을 받은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수사하지 않고 있던 중 보험회사의 수사요청을 받고도 수사하지 않은 것은 각각 직무유기죄에 해당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 ① ㉠ ② ㉠, ㉡ ③ ㉠, ㉢ ④ ㉡, ㉢

22. 선박파괴·매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선박매몰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를 매몰한다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현존하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다는 등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 ㉡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에 대해 매몰행위의 실행을 개시하고 그로 인하여 선박을 매몰시켰더라도 매몰의 결과 발생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면 선박매몰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 ㉢ 선단의 책임선 선장이 종선(從船)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다면 책임선선장이 풍랑 중에 종선 선장에게 조업지시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조선의 풍랑으로 인한 매몰 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 ㉣ 도선사가 강제도선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으로 인하여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결국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선사가 하선 후 발생한 충돌사고이므로 도선사의 업무상과실과 사고발생사이의 상당인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3. 다음 중 불가벌적 불능범(不能犯)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치사량에 약간 미달하는 농약 1.6cc’를 요구르트 한 병마다 섞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경우
- ㉡ 피고인이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초우뿌리’나 ‘부자’달인 물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 ㉢ 소매치기인 피고인이 피해자 잠바 왼쪽주머니에 손을 넣어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주머니 속에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던 경우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4.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
- ② 사문서위조죄나 공정증서원본부실 기재죄가 성립한 후, 사후에 이해관계인들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③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공문서변조죄를 구성한다.
- ④ 문서위조죄는 그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된다.

25.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성장기부터 남성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여성으로서의 성취속감을 나타냈고, 성전환 수술로 인하여 여성으로서의 신체와 외관을 갖추었으며, 수술 이후 30여 년간 개인적·사회적으로 전환된 성으로 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는 성전환자를 여성으로 인식하고 강간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한다.
- ②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한 경우, 이 행위만으로도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 ③ 상해죄에서와 달리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행하여진 폭행으로 인한 상처는 비록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상해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강간치상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된다.
- ④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를 구성하지만, 강간행위의 실행행위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할 경우에는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된다.

26. 위증죄 및 무고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공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 ②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같다.
- ③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방어권의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 ④ 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 甲, 乙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한다.

27.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한국인과 중국인이 미국인을 살해하기로 국내에서 공모하고 미국에서 실행행위를 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영국인이 뉴욕 항에 정박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화물선에서 미국인을 살해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독일인이 프랑스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중국인이 일본 국적의 원양어선에서 한국인 선원을 살해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28.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위법성 조각사유에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어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 ② 일원적 인적 불법론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행위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행위반가치가 탈락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 ③ 우연방위 효과에 관한 불능미수범설은 기수범의 결과반가치는 배제되지만 행위반가치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불능미수의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 ④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우연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9. 다음 설명 중 甲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甲이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으나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경우
- ㉡ 甲이 乙과 말다툼을 하던 중 乙이 건초더미에 있던 낫을 들고 반항하자 乙로부터 낫을 빼앗아 그 낫으로 乙의 가슴, 배, 왼쪽 허벅지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乙이 사망한 경우
- ㉢ 甲은 자신의 아파트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친구 乙에게 출입문을 열어주었으나, 乙이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들어와 함께 온 아들과 합세하여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추궁하며 자신을 구타하자,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을 치는 과정에서 乙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 ㉣ 변호사 甲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자신의 사무장 乙을 합리적 근거 없이 검사가 긴급체포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0. 다음 [보기]와 동일한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기]

금성호 선장 甲은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양식장까지의 거리가 약 30미터가 되도록 선박의 닻줄을 7샤클(175미터)에서 5샤클(125미터)로 감아놓았는데, 태풍을 만나게 되면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닻줄을 7샤클로 늘여 놓았다가 피조개양식장을 침범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 ① 갑자기 기절한 어머니의 치료를 위하여 군무를 이탈한 경우
- ②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고,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 하에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 수술을 한 경우
- ③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 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경우
- ④ A정당 당직자은 甲등이 국회 외교통상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 있던 집기를 손상하거나 국회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경우

3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므로 고의가 조각된다.
- ② 책임설에 대해서는 고의의 내용으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인식까지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③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허용구성요건에 대한 회피할 수 있는 착오는 고의범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과실범의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 ④ 엄격책임설에 대해서는 평가의 착오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착오라는 특수성을 무시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2. 다음 중 '甲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빌라를 전매하기 위하여 무등록 공인중개인 乙 등에게 그 중개를 의뢰한 경우
- ② 甲 등이 흥신소를 운영하는 乙에게 건설공사의 설계심의 평가위원 등의 행적을 감시해 달라고 의뢰하고, 이에 乙이 흥신소의 종업원 丙과 함께 설계심사 평가위원 등의 주거지, 근무처를 따라 다니면서 그들의 행적을 조사·감시한 경우
- ③ 甲이 세무사 사무실 직원인 乙과 공모하여 乙로부터 세무사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임대사업자 A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소재지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 ④ 甲이, 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乙로부터 금품을 받는 사정을 알면서도 乙을 丙에게 소개하여 주고, 자신의 차명계좌를 통해 乙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찾아 丙에게 전달해 준 경우

33. 과실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상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② 행정상의 단속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규라고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 ③ 공사현장 감독인이 공사 발주자에 의하여 현장 감독에 임명된 것이 아니고, 건설업법상 요구되는 현장건설기술자의 자격도 없다면 업무상 과실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④ 택시운전기사가 심야에 밀집된 주택 사이의 좁은 골목길이자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서 그다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택시 바퀴로 역과 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34.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 ②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 실제 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만으로도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
- ③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妻)가 범인인 남편을 위하여 범인은닉을 범한 경우에는 처벌된다.
- ④ 참고인이 범인 아닌 사람을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하면서도 그가 범인이라고 지목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구속기소되게 하였다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5.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전과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과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있을 것을 요구하나,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③ 명예훼손의 발언(피해자가 전과가 많다는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이미 피해자의 전과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④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피고인의 행위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함께 숨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36. 다음 중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 ㉡ 전자복사기를 사용해 복사한 유가증권 사본
- ㉢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로 작성된 주권
- ㉣ 리프트 탑승권
- ㉤ 정기예탁금 증서

- ① ㉠, ㉡, ㉤ ② ㉠, ㉢, ㉣
- ③ ㉡, ㉢, ㉤ ④ ㉢, ㉣, ㉤

37. 성폭속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불특정다수인이 인터넷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이는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 ② 음행의 상습이 있는 미성년자를 영리목적으로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42조의 음행매개죄가 성립한다.
- ③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자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경우에는 형법 제242조의 음행매개죄가 성립한다.
- ④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형법 제243조(음화반포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8.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부동산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후 그 명의인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그 중 1인이 독점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도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 주권(株券)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지만, 자본의 구성 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에 해당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 양식어업면허권자가 그 어업면허권을 양도한 후 아직도 어업면허권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틈타서 어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일부는 자기 이름으로 예금하고 일부는 생활비 등에 소비하였다면 이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① ㉠, ㉢ ② ㉡, ㉣
- ③ ㉢, ㉣ ④ ㉠, ㉤

39. 다음 중 일죄가 성립하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은행장인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정식 이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1년 동안 12회에 걸쳐 그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경우
- ② 변호사 아닌 피고인이 당사자와 내용을 달리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다수 수임하여 이를 처리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여 변호사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
- ③ 피고인이 부동산 공유자인 피해자 3명을 상대로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며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하여 주면 이를 담보로 매매대금을 마련하여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이 공유하는 부동산의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 ④ 작가협회 회원인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가협회 교육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한 후 이를 작가협회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40. 체포와 감금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감금죄는 행동의 자유와 의사를 가질 수 있는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정신병자나 영아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 ②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후 금품을 강취한 다음 피해자를 태운 채 계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간 경우 강도상해죄와 감금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 ③ 감금의 방법은 물리적·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해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 ④ 미성년자를 유인한 피고인이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형사소송법

1.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그 기간 안에 교도소장이나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면 이는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로 볼 수 있다.
- ② 고소자와 고발자가 재정신청할 수 있는 대상범죄의 범위는 동일하다.
- ③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④ 고발인은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포의 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직무유기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2. 구속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상 영장제도와 적법절차원칙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 ②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심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③ 영장실질심사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 할 수 있다.
- ④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경우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심문절차를 진행 할 수 없다.

3.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임의성 없는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증거라도 증거동의를 거치면 유죄증거이다.
- ② 원진술의 존재 자체 또는 그 내용인 사실이 요증 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다.
- ③ 전문서류의 실질적 진정성립은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의 법정 진술로만 할 수 있다.
- ④ 본래증거인 공판정 진술보다 전문증거에 보다 높은 증명력을 부여할 수도 있다.

4. 진술거부권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
-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 ③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진술거부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를 규정하여 벌칙으로 강제하더라도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5. 공소시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된다.
- ②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의 죄는 디엔에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 ③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④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6. 다음 내용 중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몇 개인가?

- ㉠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법원이 서류 등을 접수한 날로부터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
- ㉡ 기피신청에 의한 공판절차의 정지
- ㉢ 관할이전신청에 의한 공판절차의 정지
- ㉣ 피의자의 감정유치기간
- ㉤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판절차의 정지를 결정한 경우 그 정지 기간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7.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 처분을 기재하였다면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 ② 치료감호의 요건은 사법적 판단에 맡기면서 치료감호의 기간은 사회보호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③ 사립학교법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이다.
- ④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이 피고인 구속을 계속할 사유가 있어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하여 피고인을 계속 구속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8. 긴급체포와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압수 후 48시간 이내에 압수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④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위 피의자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9. 엄격한 증명의 대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
- ② 도로법 제54조 제2항에서 정한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는 점
- ③ 몰수추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정액의 인정
- ④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사실과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가라는 점

10. 다음 중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 ②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 ③ 친고죄에 있어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
- ④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

11. 실체적 진실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것은?

- ① 전문법칙 ② 자백배제법칙
- ③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④ 비상상고제도

12.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상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친다.
- ②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 ③ 수사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피압수자 등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면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는 면제되고, 이러한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 반환청구권도 소멸하게 된다.

13. 증거보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범죄혐의가 인정되기 전의 피내사자는 증거보전을 청구 할 수 없다.
- ② 수사상 증거보전절차는 공소제기 전에 한하여 허용된다.
- ③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의의 진술을 한 자가 공판기일에 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검사는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

14.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 ②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다.
- ③ 위의 ②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한 경우,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행해졌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④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세무종사 공무원의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공소제기 전에 고발을 하였다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15. 다음 중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직접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물리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일정한 의무를 과하는 것은 강제처분이 아니다.
- ② 소환은 수사기관이 할 수 없는 강제처분이다.
- ③ 소환은 직접강제에 해당하나 제출명령은 간접강제에 해당한다.
- ④ 피의자체포를 위한 주거수색은 대인적 강제처분에 해당한다.

16.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②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도 공범자 간에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③ 「조세범처벌법」 및 「관세법」 상의 즉시고발에도 고소·고발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④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17. 임의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고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
- ③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④ 피의자의 도착시간, 조사개시 및 종료시간,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18. 공소제기 후 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제기 후라도 참고인조사,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공무소 조회 등의 임의수사는 1회 공판기일 전후를 불문하고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 ②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③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 ④ 검사는 공소제기 후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19. 고소·고발사건의 처리와 처분 통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③ 검사는 불기소처분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급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20. 즉결심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 ② 즉결심판 피의자를 강제로 경찰서보호실에 유치시키는 것은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 ③ 즉결심판과 정식재판 사이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즉결심판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 ④ 즉결심판절차에서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나,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1. 다음 중 증거방법이 아닌 것은?

- ① 피고인의 진술 ② 의사의 상해진단서
- ③ 공판조서 ④ 증거물인 서면

22.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유죄의 선고뿐만 아니라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수 있다.
- ②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 지방검찰청에서 이를 보존한다.
- ③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23. 현행범체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준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 ② 경찰관이 음주운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피의자가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여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 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피의자를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우, 그 현행범체포는 위법하다.
- ③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④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촉성, 범인·범죄의 명백성을 요건으로 하고,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4. 소년사건의 송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밝혀진 경우 경찰서장은 사건을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② 소년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 검사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③ 소년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법원은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④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소년부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25. 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패킷 감청’은 그 특성상 수사목적과 무관한 통신내용이나 제3자의 통신내용까지 감청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수사기관이 대화의 일방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면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26.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직무질문을 위하여 경찰관서로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에 관하여 질문시의 흥기소지 조사 및 소지품 검사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검문자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경우 검문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④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야 하며,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27. 공소시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범죄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 ㉡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25년을 경과한 때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 ㉣ 공소제기는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통상의 경우 법원직원이 공소장에 접수인을 찍은 날짜가 공소제기일로 추정된다.
- ㉤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시효의 중단제도만을 인정하고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8.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적법한 압수로서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乙, 丙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압수하여 乙, 丙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발견하였다면, 위 녹음파일은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 ③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29.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 ③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증거능력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④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부동의하더라도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30. 압수와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이 인정하는 압수의 제한은 군사상 비밀, 업무상 비밀, 공무상 비밀, 통신상 비밀이 있다.
- ② 공범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하여 여전히 그 물품의 압수가 필요하다거나 공범자에 대한 재판에서 그 물품이 몰수될 가능성이 있다면 검사는 그 압수해제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도 있다.
- ③ 군사상 비밀에 관한 서류는 그 책임자의 승낙이 없으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 ④ 변호사, 감정인, 간호사 등은 업무상 비밀을 위하여 자기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압수를 거부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31. 자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직접 고문을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피고인이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 자백한 경우에는 자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검찰주사가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피의사실 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경우에는 자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거나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의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약속 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④ 피고인의 자백의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비록 그 임의성을 의심하게 된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명백하더라도 자백의 임의성은 부정된다.

32.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자백배제법칙(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자백은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므로 법정에서 이에 대한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

- ③ 탄핵의 대상은 진술의 증명력이고 진술에는 구두 진술과 진술이 기재된 서면도 포함된다.
- ④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들은 모두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로서 피고인이 각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러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3. 녹음내용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남편 甲은 처 乙이 골프연습장 강사 丙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乙과 丙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 ㉡ 이용원을 경영하는 甲이 경쟁업체를 고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乙의 동의를 얻어 乙로 하여금 경쟁미용실 주인 丙에게 전화하여 “꺾불을 뚫어주느냐”는 용건으로 통화하게 하고 이를 녹음한 경우
- ㉢ 채권자 甲은 채무자 乙이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하자, 변제를 요구하는 전화통화를 하면서 몰래 전화통화를 녹음한 경우
- ㉣ 교사 甲이 학생들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교사 乙이 수업시간에 발언한 내용을 들었다는 학생들의 진술을 녹음한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4.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입법례 중 혼합주의를 채택한 형사소송법 부칙에 의하면 항소심이 신법에 의하여 구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제1심의 증거조사절차가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법의 취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②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에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다.
- ③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중국의 영토에 속하므로 대한민국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구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녹음 내용’과 ‘검사들이 ○○그룹으로부터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당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35. 체포·구속적부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법원 또는 법관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 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다.
- ㉣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 ㉤ 법원은 체포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 ㉥ 동거인이나 고용주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청구할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6. 배상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검사는 배상명령 대상 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는 중상해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존속폭행치사상죄 등이 있다.
- ③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며,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④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37. 다음 중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공소장에 유가증권위조의 범행일시를 '2000년 초경부터 2003년 3월경 사이에'로 기재하였다.
- ㉡ 메스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투약일시를 '2009. 8. 10.부터 2009. 8. 19.까지 사이'로, 투약장소를 '서울 또는 부산 이하 불상'으로 기재하였다.
- ㉢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에 대한 공소제기시에 '2008년 1월경부터 같은 해 2월 일자불상 15:00 경까지 사이에 메스암페타민 약 0.7g 을 매수한 외에, 그때부터 2009년 2월 내지 3월 일자불상 07:00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매수 투약하였다.'고 기재하였다.
- ㉣ 「변호사법」 위반사건에서 '2006. 12. 14.경부터 2007. 2. 15.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받았다.'고 기재하였다.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서 범행일시를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투약 가능 기간을 역으로 추정한 '2010. 11.경'으로, 투약장소를 시(市)와 구(區)까지 기재한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8. 다음은 형사소송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형사소송법은 형법과는 달리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구법을 적용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 ② 수사이전 단계를 내사라 하는데,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권리를 피내사자에게도 준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 ③ 현행 형사소송법은 직권주의 형태를 강하게 나타내며 공판정에서 피고인 좌석의 위치도 변호인과 분리되어 법관과 대면토록 대응하게 위치시키고 있다.
- ④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시작되고, 피내사자의 지위가 피의자의 지위로 바뀔을 규정하고 있다.

39.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주신문과 반대신문에 있어서 유도신문이 금지된다.
- ㉡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을 신문하는 것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가능하다.
- ㉢ 간이공판절차에 있어서는 교호신문의 방식에 의하지 않고 신문할 수 있다.
-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이 끝난 후에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다시 신문할 수 있다.
- ㉤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후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을지라도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

40.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현장에서 압수·수색처분을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모두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 ③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없다.
- ④ 압수물인 디지털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저장매체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